

북한개발소식

2026 AUG

08

통권 250호

이달의 주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한반도 통일

탈북민 수기

탈북민 수기 : 김정직 목사 (제 8화)

북한뉴스

중 서열 1~5위 총출동...

조약 65주년에 전략적 관계 과시한 북중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한반도 통일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6 AUG

이달의 주제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한반도 통일

권두칼럼	01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한반도 통일
칼럼_1	12	김병로 _ '적대적 2국가론'과 혁신적 통일 구상
칼럼_2	18	송인호 _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한반도 통일
칼럼_3	23	하광민 _ 남과 북, '두 국가'로 갈라서는가 - 분단의 시대를 다시 읽는 개혁주의 통일선교의 시선
탈북민 수기	31	탈북민 수기 : 김정직 목사 (제 8화)
서평	35	한반도 통일과 평화적 상상력
북한뉴스	37	중 서열 1~5위 총출동... 조약 65주년에 전략적 관계 과시한 북중 외
북한 지도 제목	40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지도 외



올해 3월 북한은 헌법을 개정했다.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총 9차례 헌법을 개정한 북한이지만¹⁾, 이번 개정은 특별히 큰 이목과 관심을 끌었다. 헌법 개정 내용에 '두 국가론'을 구체화한 영토 조항이 신설되었고, 통일 관련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개정 헌법은 제1장 제2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라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헌법 9조에 있었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통일'은 과거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합의한 통일 원칙이다.

이러한 헌법 개정은 소위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불리는 북한의 새로운 노선에 따라 남북 관계가 근본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경로를 걷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로 평가된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는 2023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처음 제기되었다. 이후 북한은 대대적으로 대남 조직을 통폐합하고, 한반도 이미지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만을 표기한 것으로 교체하

1) 김일기, 김인태 (2026), "북한의 개정 헌법 분석과 정책적 고려사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전략보고 No.398 (2026년 6월), p. 1.

며,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을 비롯한 통일 관련 구조물을 철거하는 등 이를 반영한 실제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 헌법 개정에서 관련 조항이 삽입됨으로써 ‘적대적 두 국가론’은 북한의 단기적인 전략이 아닌, 장기적인 노선의 변화임을 확실하게 하였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국내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남과 북이 별개의 두 국가와 같은 관계였던 만큼, 이를 확인하는 차원일 뿐이라고 보기도 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 또는 한조관계론 등이 이야기되기도 한다. 또 다른 방향에서는 북한의 두 국가론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한민족과 통일에 대한 개념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랜 기간 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해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북 관계의 변화는 혼란스러운 점이 많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어떤 경로로 나오게 되었는지, 앞으로의 남북 관계는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언급한 것은 2023년 12월이지만, 그 이전부터 북한의 통일 정책은 변화를 보여왔다. 2019년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모든 남북대화를 중단하고, 2019년 12월 정면돌파전을 선언하였다. 이후 2020년 6월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으며, 6월 16일에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대남 강경 노선을 보여왔다. 특히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사업총화보고에서 “통일이라는 꿈은 더 아득히 멀어졌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해당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의 통일과업 부분에서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북한이 통일을 대하는 관점이 변화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²⁾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남한과의 체제 경쟁의 열세를 인정하고 통일 담론을 핵 보유 담론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한 것의 일환으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북한 내부 정치적으로 남한을 적대국으로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도 변화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박형중(2026)³⁾은 남북 관계가 2018년 이후 새로운 장기 국면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했다. 과거 북한은 대남 우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통해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체제 경쟁에서의 열세, 미국과의 회담 실패, 그리고 북중러 연대의 점진적 강화 등에 따라 통일 서사 대신 핵 억제력 서사로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핵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영구 적대 병존한다는 노선으로 전환하였고, 이러한 노선 아래에서는 한국이 반드시 적대적 국가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필연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과의 적대성이 감소하면, 북한의 정권 안보의 정치적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황수환(2025)⁴⁾은 지위 위협이라는 개념을 통해 북한의 행동을 분석하였다. 지위 위협은 기존에 우월적 지위를 누려온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세력의 등장으로 자신의 지위가 불안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며, 주로 물질적 위협(희소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제적 경쟁)과 상징적 위협(사회문화적 적대와 편견)으로 나타난다. 황수환은 여기에 외교적 위협을 더해 북한의 행동을 분석하였다. 북한이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자신들이 이기거나 우위에 서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였고, 이로 인한 물질적, 상징적, 외교적 위협을 느꼈으며, 심리적으로 느끼는 위협을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는 각각 물질적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 활동 증가와 경제 정책 노선 전환을, 상징적 위협에 대해서는 주민통제 강화와 남한 흔적 지우기를, 그리고 외교적 위협에는 진영화 된 국제질서 속에서 안보 보장을 위한 핵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로 외교활동의 보폭을 확장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제기한 궁극적 목적은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정당화, 대남 무력사용에 대한 정당성 확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내부결속 합리화, 국제적 고립 타



〈평양 통일대축전과 제10차 범민족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2001년 8월 14일 준공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이 철거를 지시하면서 2024년 초 철거되었다〉

2) 권숙도 (2024),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통해 본 북한 통일정책의 전환”, 대한정치학회보 32집 4호 (2024년 11월), pp. 136-137.

3) 박형중 (2026),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기 국면”, EAI 동아시아연구원 (2026.6.24.), pp.1-10.

4) 황수환 (2025),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왜 제기했을까?: 지위위협 요인을 중심으로”, 북한연구소 북한학보 vol.50, no.1, pp.. 97-126.

파 및 주권 국가로서 국제적 지위 인정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⁵⁾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제기한 ‘두 국가론’과 유사한 사례는 과거 동독에서도 찾을 수 있다. 동독의 ‘두 국가론’은 통일 여력 미비, 서독과의 경제 격차, 주민의 서독 동경 등 모든 여건에서 열세인 상황에서 동독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제기되었다. 1960년대 후반 동독은 자신의 주도로 통일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통일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1969년과 1974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 제1조의 ‘통일’과 ‘국적’ 내용을 삭제하였다.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의 ‘신동방정책(Die neue Ostpolitik)’으로 동서독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동독은 서독이 동독을 법적으로 승인하기를 요구하여 양국 간 기본조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⁶⁾

북한의 실제적인 위협

이렇듯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통해 남북 관계를 과거와 같이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을 추구하는 특수 관계’가 아닌 교전국, 적대국으로 남한을 대하겠다는,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남 대적 투쟁 원칙에 입각한 공세적인 대남 통일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제 북한에게는 남한을 군사적으로 타격하거나 남한에 핵을 사용하는 일도 같은 민족에 대한 공격이 아닌 적대국에 대한 정당한 군사적 행동일 뿐이다. 실제로 김정은은 2023년 군 지휘훈련과 작전회의에서 남한 주요 군사시설과 지휘부 목표가 표시된 지도를 공개하였으며, 8월에는 남반부 점령을 가상한 ‘전군지휘훈련’을 실시하였다. 더 나아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유사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하는 문제를 언급하였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점령’, ‘평정’, ‘수복’, ‘편입’이라는 표현을 동시에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이렇듯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더 노골적이면서 실제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태원⁷⁾은 이번 헌법 개정으로 기존 남북 관계의 패러다임이 뿌리째 흔들렸다고 평가한다. 핵 지휘권이 헌법적 권한으로 규정되면서 비핵화 협상이 구

조적으로 어려워졌으며, 두 국가라는 헌법적 규정은 한국을 패싱하는 북미간 직거래 환경을 더욱 공고화하였고, 그간의 교류 협력 자산이 소멸하면서 향후 남북 관계가 재개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기초 위에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북한의 두 국가 노선을 공식 수용할 수는 없지만, 이를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정하고 ‘비적대적 평화 공존’을 단기 목표로 설정하고 장기적인 통일 담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박원곤⁸⁾은 북한의 실제적인 핵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적대적 교전국론은 단순한 통일 포기 선언이 아닌, 남북 관계를 핵 대 핵의 적대적 국가 관계로 재편하는 과정이다. 북한은 현재 대한민국을 별개의 교전 국가로 규정하고, 유사시 적대국에 대한 군사적 승리와 영토 완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남한에 대한 언급 없이 미국의 위협에 대한 억제와 자위권 확보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한국을 핵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적 적대국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한국은 기존의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와 평화공존 담론에만 머물기보다 억제·관리·위기대응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남북 관계를 단순한 ‘통일·대결’ 이분법이 아닌 장기적 관리 대상으로 재규정하는 전략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박형중⁹⁾은 북한 정권은 한국이라는 적국이 없다면 내부 정치적 붕괴를 피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북한은 남북이 영구적으로 적대하며 병존하는 상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추진할 것이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남북 관계는 전면전은 발생하지 않지만 ‘차가운 평화’¹⁰⁾ 조차도 오기 어려운 ‘냉전의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여전히 약자인 북한으로서는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 ‘우발적 핵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협’(The Threat That Leaves Something to Chance)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 우세하지만 위험 회피 성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4년 10월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하여 서울 등 남한의 여러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지도를 펼쳐놓고 참모들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5) 위의 글, p. 156.

6) 손선홍 (2025),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선언과 우리의 대응 - 동독의 ‘두 민족 두 국가론’과 비교”, 외교 제152호 (2025.1), pp.176-179.

7) 하태원 (2026), “북한 ‘두 국가론’ 헌법화와 새로운 남북관계 구상”, 세종연구소 세종포커스 (2026.05.18.), pp. 1-5.

8) 박원곤 (2026), “통일에서 점령으로: 북한의 적대적 교전국론”, EAI 동아시아연구원 (2026.05.18.), pp. 1-8.

9) 박형중(2026), 앞의 글.

10)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양측의 기본적 합법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낮은 수준의 제도화를 이루는 것.

이 높은 한미를 견제하고 제압하는 방도이기 때문이다.

엇갈리는 평화와 통일

이렇듯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기존의 남북 대화와 통일 논의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북한이 통일 논의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남북이 통일을 논하는 근본 이유였던 ‘민족’ 개념을 버린 만큼,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당장의 평화가 심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통일을 논하기 이전에 국가 대 국가로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명림¹¹⁾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기 이전부터 ‘한조관계’라는 개념을 제시해 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남(한국)과 북(조선)은 그동안 같은 민족으로서 가진 동질성보다는 상이성과 대결성이 오히려 두드러져 온 반면, 한국의 보수와 진보 진영은 각각 이념과 민족을 근거로 남북 관계를 민족 내부의 문제로 이해하려 한 것을 중대한 패착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남과 북이 ‘민족 내부’나 ‘특수 관계’에 매몰되기보다 보편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상호 국가성과 주권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적대, 간섭, 충돌하지 않는 원칙과 정책을 펼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데 더욱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그는 별도의 칼럼을 통해 자신의 ‘한조관계론’은 한국과 북한이 서로를 외국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공존을 위해 상호 국가성과 주권성을 존중하며 서로 적대·간섭·충돌하지 않는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며, 통일 역시 미래로 유예하는 것이지 영구 폐기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리고 이번 북한의 헌법 개정과 적대적 두 국가론은 공존을 위한 ‘두 국가론’이 아닌 ‘두 외국론’이라고 비판했다.¹²⁾

반면 비록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더라도, 우리는 기존에 북한과 합의한 ‘특수관계’를 유지하며 헌법이 부여한 영토조항과 통일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손선홍¹³⁾은 동·서독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여 ‘사실상의 두 독일 국가’를 인정하는 국제 환경에서도 서독은 동독을 승인하지 않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유지했으며, 또 기본법의 취지를 살려 서독으로 오고

자 하는 동독 주민을 모두 받아들이는 등 정책을 꾸준히 유지했기에 독일 통일이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한국 역시 북한과 합의한 ‘특수관계’를 유지하며, 헌법에 규정된 영토조항을 유지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이다. 그렇지만 기존 헌법의 통일조항과 영토규정에 위배된다는 점, 비록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통일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호응하는 모양새가 되어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북한에 넘겨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비판 등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러한 여러 논의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교차하는 상황의 이면에는 ‘평화’와 ‘통일’이 서로 상충하는 가치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과거에는 남과 북이 모두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서로 다른 방식일지언정 통일이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의 진전임에 이견이 없었다. 그렇지만 북한이 ‘민족’과 ‘통일’을 폐기하면서 통일은 모두가 동의하는 의제가 아닌, 한 편이 거부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으로 받아드리는 의제가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 논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양상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평화와 통일이 상호 배타적인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평화를 위해 통일을 포기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이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분단의 장기화 또는 영구화를 한반도 평화의 진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전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체하는, 통일과 평화를 연계 또는 포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명규¹⁴⁾는 통일·평화·번영을 한데 묶으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초를 개선하되 그 한계를 뛰어넘고, 두 국가론이 가지는 오류와 위험을 피하면서, 우리 사회가 가진 발전 동력과 융복합적 에너지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두 개의 코리아를 인정한 위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논의를 찾아가자는 ‘코리아 공동체’를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코리아 공동체는 정치, 경제, 사

11) 박명림 (2020), “한국과 조선: 한조관계의 역사·이론·방향 - 남북관계의 종식을 위하여”, 동방학지 제190집 (2020년 3월), pp. 25~65.

12) 박명림, “‘한국과 조선’: 바른 두 국가관계를 향해”, 중앙일보 (2026.06.1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6106>>

13) 손선홍 (2025), 앞의 글.

14) ‘2026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3부 ‘통일론의 혁신 모색 -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https://www.tongnas-tory.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7>>

회, 문화, 군사, 교통, 관광의 제반 영역이 서로 다른 수준과 속도로 통합되는 공동체이다.

김병로는 같은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을 이룬다는 ‘민족론’에 비해 ‘두 국가론’은 서로 다른 국가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 해야 하므로 통일로 가는 길이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적으로 유럽 연합(EU)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독립국가연합(CIS) 등 국가연합 방식의 결속체가 존재했던 만큼 유럽형 국가연합 방식의 통일을 추구한다면 두 국가가 ‘연합’의 방식으로 국가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⁵⁾ 이런 맥락에서 통일국가로 단번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남한)과 조선(북한)이 국가연합 방식의 통일을 우선 추진하고, 최종적인 통일 국가의 형태는 다음 세대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통일 국가 모델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의 국제화를 유도하고, 핵 문제와 평화 체제 및 경제협력 등 세 개의 차원을 연계한 ‘북합평화기획’을 펼치는 ‘창조적 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¹⁶⁾ 이 외에도 송인호¹⁷⁾는 한반도라는 민족, 역사, 문화적 공통점과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제 및 목표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보편적 가치의 측면을 모두 담아낸 명칭인 ‘한반도가치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통일의 비전을 놓을 수 없는 이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단순히 전략적인 차원을 넘어 남북 관계와 통일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렇다면 오랜 기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해 온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먼저 짚어볼 점은 북한에서 제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인지의 여부이다. 한편에서 보면 여러 학자가 지적하듯 남과 북은 오랜 분단을 거치며 상당히 이질적인, 어찌 보면 다른 민족에 가깝다고 할 만큼 많은 차이점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치·군사적으로 남과 북

은 여전히 전쟁 중인, 휴전 상태의 교전국이다.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북한과 북한 사람들을 우리와 관계없는 또는 적대적인 국가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민족과 동포 의식을 가지고 있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오랜 분단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은 있으나, 한민족으로써의 동질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그간의 접촉과 만남을 통해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 주민들은 오랫동안 남과 북을 한민족으로 여기고 통일의 희망을 품고 살아왔다. 이와 관련하여 탈북민 출신 현인에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장은 현재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논의는 절망적인 북한의 삶 속에서 통일을 통해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을 꺾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탈북민 입장에서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남한이 북한 주민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두 국가 논의가 북한 주민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기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¹⁸⁾

특별히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는 그 시작부터 현 북한 지역으로부터 뿌리를 내렸으며, 그 영향력이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다. 한반도의 첫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경로, 최초의 개신교 교회 등 한국 기독교의 뿌리는 북한 지역이 중심이었다. 주요 교단, 교회, 신학교가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월남민 교회가 남한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이뿐 아니라 분단 기간 동안에도 고난의 행군 당시 많은 북한 동포를 섬길 수 있었다. 현재도 북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있으며 북한 안에도 민족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의 주요 교단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남한 지역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교회로 인식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유지해 왔다. 이렇듯 한국 교회의 뿌리와 역사를 생각한다면 남과 북을 단순한 별개의 국가 또는 적대적 국가로 보는 관점은 교회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남북 관계와 통일에 관하여 정치·외교적 차원과 교회적 차원을 구분 지어 볼 것을 제안해 본다. 정치·외교적 차원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증대되는 위협을 무시할 순 없다. 북한의 적대성을 완화하고 위협을 잘 관리하기 위한 평화적 노력이 요구된다. 다만 남과 북

15) [특별대담] 김병로 교수 “차기 정부, 한반도 안정화하는 일 급선무”, 뉴스파워 (2025.05.10.), <<https://www.newspower.co.kr/61402>>

16) 김병로 외, 「분단의 고난과 통일의 비전-21세기 한반도 통일 선교와 신학」, 서울:도서출판 동연(2026), pp. 42-44.

17) 송인호 (2024), “동서독 관계가 주는 시사점”, 세종연구소 2024년 제1차 세종특별정책포럼 자료집, p. 38.

18) [에디터의 Q] “김정은 두 국가론에 대한 동조, 통일 바라는 북한 주민 희망 꺾는 것”, 조선일보 (2026.05.10.),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6/05/10/PRAJGVV5AREKZDFTB-ZTBCDNOYA/>>



〈1883년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송천리 소재마을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 소래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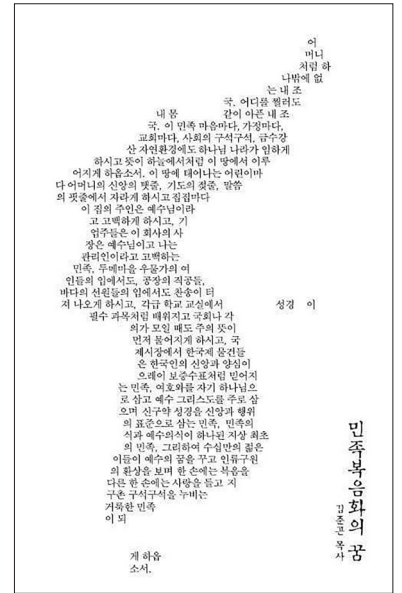
을 법적으로 분리된 국가로서 인정하거나 이를 반영하여 헌법 개정 등 주요 제도를 수정하는 데까지 이르는 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남과 북을 별개의 국가로 공식화하는 일은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또한 남한과의 영구 대결을 원하는 북한의 전략에 오히려 호응하는 꼴이 되어 이후의 남

북관계에서도 북한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모양새가 연출될 우려도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통일의 시기가 왔을 때 남한이 주변국에 비해 가지는 연고권에 대한 문제도 있다. 실제적으로는 헌법의 조항을 근거로 부여되는 탈북민에 대한 지위나 탈북민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를 고려해 볼 때, 평화를 위해 남과 북이 상호 주권성과 국가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법적인 차원의 것이 아닌 ‘사실상의’ 관계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교회적 차원에서는 한국 교회가 통일을 포기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북한의 사회와 사람들, 그리고 지하 성도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한국 교회는 오랜 기간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교회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왔다. 또한 북한의 폭정과 억압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하 신자들에 대한 동포 교회로서의 책임이 있다. 사회적으로 남한에서 이야기되는 ‘두 국가론’ 논의의 이면에는, 통일을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여론이 높아지고 북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견 서로 무관한 존재가 됨으로써 두 국가 사이에 평화공존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모 학자가 이야기하듯 “한국은 지금까지처럼 자유·인권·민주주의·평등·복지의 길로 (더) 나아가면 된다. 조선의 세습·수령체제·일인지배·강제수용소·일당독재는 그들의 선택이다”¹⁹⁾라는 의견이 대중들에게는 더 공감을 받는 입장일 수 있다. 앞으로 정치, 외교적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 통일의 희망이 더욱 희미해지고 사회적으로 통일에 대한 논의가 더 약해지는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일어나는 억압과 폭력, 박해에 대해 단순히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교회가 택할 행보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마주하게 되더라도 교회는 꾸준히 북한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것

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과 복녔의 형제자매들을 저버리는 일일 뿐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무관심이 아니라 만남과 소통, 이해를 위한 노력으로라야만 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정치적인 현실을 초월하여 통일과 선교에 힘써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 그동안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통일' 담론을 폐기했다. 그렇기에 어떤 면에서는 뢰드거 프랑크(Ruediger Frank)²⁰⁾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은 한반도 통일의 유일한 지지국임을 자처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한반도의 특정 지역이 아닌 한반도 전역을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하는 정체성을 지켜왔다. 이러한 정체성과 동포 의식은 한국 교회의 뿌리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북한으로부터 시작된 ‘적대적 두 국가’ 논쟁이 한국 교회에 기존의 사회적 통념에 따른 통일 논의를 넘어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재확인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 믿음 안에서 정치적 현실을 넘어 평화와 통일, 북한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역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남과 북의 교회가 하나 되어 한반도와 열방을 섬기는 '한반도 교회 공동체'를 꿈꾸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일 것이다. 🐟



20) Ruediger Frank(2024), "North Korea's New Unification Policy: Implications and Pitfalls", 38North (2024.01.11.), <<https://www.38north.org/2024/01/north-koreas-new-unification-policy-implications-and-pitfalls/>>

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82314>

‘적대적 2국가론’과 혁신적 통일 구상¹⁾

김병로 (KPI 연구위원 / 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북한의 2국가 헌법개정

북한은 2026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에서 영토조항 신설과 통일조항 삭제를 포함한 헌법개정을 단행했다. 2023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흡수통일, 체제 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강변하며 통일·민족 정책 폐기를 선언한 이후 2년 만에 헌법에 그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개정 헌법 제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북한의 실질적인 통치가 미치는 휴전선 이북으로 영토를 한정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영토 규정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북한이 취한 일련의 과격한 행동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 헌법에 규정된 영토조항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설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정권붕괴와 흡수통일,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로 간주하여, 이후 통일 및 대남 기구를 모두 해체하고 모든 문헌에서 통일·민족 담론을 제거하며 기념물과 상징물을

모두 철폐했다. 남북을 잇는 철도, 도로를 파괴하고 애국가에 들어 있던 ‘삼천리’라는 대목까지 삭제하는 결기를 보였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하기 시작한 2023년 12월 제8기 제9차 당 전원회의〉

이러한 결기를 감안하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헌법의 영토조항을 열거하며 근원적 적대성을 상기하던 언행을 상기하면 개정된 북한헌법의 영토조항은 의외다. 한국과 적대적 관계를 법제화하려고 했다면 북한의 영토를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여 한국과 맞대응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북한의 실질적 통치권이 미치는 휴전선 이북으로 영토를 한정하였다. ‘적대성’은 자제하고 ‘두 국가’만 반영한 셈이다.

적대의 두 차원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의 적대성은 두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정책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적 차원이다.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적대성의 이슈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근래에 고조된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이 극도의 대남 혐오감에서 폭발한 것이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대북 전단 살포가 발단이 되어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내려보내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무인기 침투 등 공격적 대북 활동으로 북한의 감정적 대응이 촉발된 측면이 없지 않다. 한동안 지속되었던 김여정 부장의 남한에 대한 거친 언사와 원색적 비난에서 남한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의 감정을 충분히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정책이나 태도의 적대적 측면보다 구조적 차원의 적대성이 훨씬 심각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2026년 2월 23일 당 제9차 대회 연설에서 북한의 대남 정책 전환이 “일시적 전술적 조치가 아니라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역사적 선택이다.”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적대의 정책이나 감정의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고민 속에서 나왔음을 말해준다. 무엇보다 남북 간 경제력 격차가 크게 벌어져 향후 50년 이내에는 남한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좌절감이 심한 데다,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은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1) 이 글은 저자가 한반도평화연구원에 기고한 글을 저자의 허락을 받아 다시 씁니다.



〈북한 당국이 남한 드라마를 봤다며 노동교화형 12년을 선고한 평양의 16세 소년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 (사진=샌드연구소)〉

특히 한류가 북한 청년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사상적 변화가 우려되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청년들의 사상·의식을 단속하는 법 제정을 통해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핵무기이므로 한국을 동족의 범주에서 들어내고 적대국·교전국으로 간주함으로써 핵무기의 위력을 높이고 흡수통일의 위험을 차단하려는 전

략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국가의 3요소

보다 근원적인 구조적 적대성은 2국가론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남과 북이 지난 80년 동안 민족국가로 발돋움했고 특히 1991년 9월 유엔 가입과 탈냉전의 변화를 거치면서 한국과 조선으로 발전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국가제일주의’ 기치 아래 북한에서도 근대국가 의식이 성장했다. 탈냉전 직후 소환한 조선민족을 바탕으로 새로운 민족의식과 국민 정체성을 발전시켰고, 김정은 정권 하에서 국가의식을 동원하며 근대 민족국가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다.

주지하다시피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조선 사이에 이 세 개념이 명확치 않다. 첫째, 영토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남과 북이 서로 한반도 전체를 자기의 영토로 규정하면 국토를 두고 분쟁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개정헌법에서 영토를 휴전선 이북으로 한정된 것은 국가의 성격을 명문화하면서도 적대성을 명시화하지 않으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동시에 한국으로 하여금 헌법의 영토조항을 휴전선 이남으로 수정하라는 압박도 된다.

둘째, 국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한국과 조선의 국민 정체성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내적인 정치의식은 민주주의 자부심과 주체사상 자긍심으로 각각 다르며, 주변국 의식도 한국은 미국, 조선은 중국으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역사의식에서도 한족과 맥족, 신라와 고구려로 민족의 역사적 뿌리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며, 민족도 한민족과 조선민족으로 완전히 분화되어 있다.

셋째, 주권의 경계도 모호하다. 조선인민이 영토를 벗어나 한국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국 국민으로 간주된다. 탈북자 문제는 이런 면에서 새로운 갈등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상대의 실체를 인정한다고 규정은 해놓았으나 헌법과 여타 법률에서 상대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며 북한의 노동당 규약도 한국의 정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양국이 상대의 헌법과 법률을 인정하는지, 그에 따라 선출된 국가지도력을 존중하는지도 의문이다. 한국과 조선의 통치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주권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근대 민족국가 형성의 결과

구조적 맥락에서 ‘적대적 2국가론’은 조선이 국가제일주의를 기치로 근대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흡수통일 위기에 처한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2국가론은 이런 점에서 지난 80년의 역사적 산물이며 그 근원은 13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종은 근대화의 큰 비전을 갖고 한민족을 창제하며 조선에서 탈피하여 대한국의 출범을 선포했다. 임시정부 역시 이 한민족의 역사의식을 이어받아 근대국가를 형성하고자 했다, 하지만 조선의 이탈로 그 열망을 통합하지 못했다. 해방 후 남과 북에 수립된 정부는 냉전기 남한과 북조선에서 탈냉전기에 명실상부한 한국과 조선 두 ‘민족국가’로 성장했다.

냉전기에는 남한과 북조선이 통일을 이루어야 근대 민족국가를 완성된다는 의식이 압도했다. 하지만 통일을 통한 근대국가의 완성이라는 당위적 도식은 탈냉전 35년 동안 현저히 달라졌다.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과 조선민족을 국가 건설에 동원한 결과 한국과 조선으로, 대한민국과 조선공화국 두 민족국가로 발전했다. 정치는 물론 경제나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로 변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미국에 의존하는 기형체 식민지 속국’, ‘양키문화로 혼탁한 사회’ 등으로 폄하한 데서 드러나듯 조선의 입장에서 한국은 단일민족주의를 공유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수령 권위주의 체제와 핵무기로 위협하는 조선과 단일민족주의를 공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달라진 두 민족국가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는 논쟁적이다. 단일민족주의가 여전히 강하게 관통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한민족과

조선민족이 전혀 다른 민족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세대에 따른 인식 차이도 존재한다. 기성세대는 단일민족주의 시각이 강한 반면, 젊은 세대는 두 국가론을 더 지지한다. 한국과 조선의 자국 민족주의와 단일민족주의가 실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객관적 평가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적극적 평화공존의 모색

한국 사회에는 현재 두 국가의 현실을 받아들여 평화공존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과 북한의 주장을 거부하고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두 주장으로 의견이 맞선다. 평화와 통일이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평화와 통일이 연결되어 있고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한국과 조선은 엄연히 두 국가로 달라졌고 구조적 적대성도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첫 단계 해법은 정책과 행동에서 적대성을 지양하고 소극적 의미의 평화공존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책적 적대성은 자극적·공격적 행동을 자제하는 등의 정부 정책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평화적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구조적 적대성을 해소하고 두 국가의 미래 관계를 모색해 나가는 적극적 평화공존은 단시일에 실현되기 어려우며 많은 시간과 창의적 지략이 필요하다. 적대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분명한 국가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일은 대한민국의 영토조항과 통일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이어서 이념 갈등을 증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과 주권의 경계를 확정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주제다.

적극적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려면 한국과 조선이 단지 두 국가로 존재하는 소극적 평화공존을 넘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장 먼저 정전상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한·조·미·중 4자 평화회담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한·조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유엔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브릭스(BRICS) 진출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수요에 부응하는 협력과 지원을 실행함으로써

평화공존의 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 미래의 혁신적 구상

나아가 2국가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의 담론도 준비해야 한다. 단일민족주의가 통일의 동력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면 2국가의 통일을 어떻게 추동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진보나 보수 진영이 모두 두 국가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보수는 2국가론을 부정하고 민족론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보는 2국가론을 받아들여 통일론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국가의 통일은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통일의 개념을 전통적·당위적 개념에 가두지 말고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통일의 개념을 확장하면 새로운 형태의 두 국가 통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두 국가의 먼 미래를 개방 모델로 열어두면서 국가연합과 같은 방식으로 통일을 시작할 수 있다. 단일민족주의 신화를 붙들고 달라진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80년간 지속해 오던 민족노선과 통일정책을 한순간에 폐기하고 적대적 두 국가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많은 아픔과 회한으로 분단시대를 살아온 남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납되기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노선 전환과 두 국가의 존재는 엄연한 정치적 현실이다.

통일을 전통적·당위적 관념에 가두지 말고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코리아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구상해야 한다. 국민의 통일외식은 많이 희박해졌고, 새로운 방식의 통일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과 조선을 관통하는 ‘대한 조선’을 새로운 미래 통합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창의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 한국과 조선이 두 국가로 존재하면서도 기존의 관념을 넘어서는 혁신적 통일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한반도 통일¹⁾

송인호 (한동대학교 한동통일평화연구원장·부총장)

2023년 말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였다. 이어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는 등 기존의 통일노선을 폐기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2026년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루어진 헌법 개정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개정 북한 헌법은 영토조항을 신설하여 북한의 영토를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령토”로 규정하였다(제2조). 또한 종전 북한 헌법 제9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를 삭제하였다. 이렇게 영토조항 신설 및 통일조항 폐지를 통해 ‘두 국가관계’를 더욱 명확화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경제난 속에서 내부 결속 강화, 김정은 체제의 장기 세습 정당화, 핵무력 사용의 명분 확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된다.

이러한 북한의 최근 행보는 과거 분단 시기의 동독과 매우 유사하다. 동독은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후 분단의 영속화를 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독은 1974년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동독과 서독은 서로 다른 두 민족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독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서독은 동독과 교류·협력하면서도 통일에 대한 헌법적 원칙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서독 연방헌법재판소는 동서독기본조

약 체결 이후에도 “동서독 관계는 외국 간의 관계가 아니라 특수관계”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동독을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며, 동서독기본조약 제6조의 내정불간섭 조항에도 불구하고 서독 기본법에 따른 동독 주민에 대한 보호의무는 계속된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헌법적 일관성이 있었기에 독일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우리 헌법은 서독보다 더욱 명확한 통일 원칙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국가의 책무로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을 바탕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해석해 왔으며, 북한에 대하여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해 왔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두 국가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는 결과를 근거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만으로 국민들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폐기하거나 대한민국의 영토를 휴전선 이남으로 한정하는 데 동의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보다 정확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려면 영토조항의 개정이나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변화까지 함께 질문해야 한다. 단순한 현실 인식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헌법 질서의 변경에 대한 국민적 합의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일부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표현이다. 마치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라는 표현과 같다. 두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남북의 분리성과 이질성을 강화하는데, 여기에 평화라는 수식어를 붙인다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의 평화 증진을 위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과연 ‘두 국가론’이 현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오히려 안보 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국가론’은 우선적으로 헌법상 영토조항의 폐기 또는 축소를 전제로 하



〈1972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와 발리 슈토프 동독 수상이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교환하고 있다.〉

1) 필자의 책 및 기존 칼럼을 종합하여 정리하였음.

며 나아가 통일조향의 폐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결론적으로 영구분단론과 맥락을 같이 하게 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에 법리적 지장을 초래하고, 북한의 급변사태 등 북한 이슈에 있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중요한 헌법적 근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오히려 남북한이 국가관계가 아니라 언제가 통일을 할 상대방이라는 특수관계론이 그동안 남북주민 상호 간의 포용성을 높여주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013년 북한에서 헌법보다 상위의 최고규범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개정하여 세습체제를 공식화하고, 2022년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하는 등 남북한의 배치성과 적대성이 커지는 현시점에서, 북한 당국이 특수관계론을 포기한다고 우리까지 포기한다면 자칫 북한의 이중적 지위 중 ‘평화통일을 위한 동반자 관계’가 사라지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적대적’ ‘국가관계’만으로 전환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의 이번 정책변화는 북한주민들에게도 충격적이고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도 국가관계 전환 논의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국가관계로의 전환은 북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체제로 변한 경우에 논의하면 될 문제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통일전략을 추구해야 하는가.

제헌헌법부터 존재했던 헌법 제3조 영토조향은 북한 주민 역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4조는 통일 지상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고 선언하여, ‘통일의 가치적 지향점(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통일국가수립)’과 ‘방법적 한계(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를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은 제10조에서는 국가의 존재 목적이 국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헌법 해석에 따르면 통일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의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통일은 한반도와 부속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인 것이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가치’에 기반한 통일을 명시하며,

통일의 보편적 측면을 분명히 하고 있다.²⁾ 통일을 비롯한 남북관계는 단순히 민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자유,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치 중심의 접근은 한반도 전체에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은 혈연적 민족주의를 넘어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시대적 변화와 헌법의 가치지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남북한의 가치체계가 하나되지 못한 상황에서 섣부른 남북연합 단계는 위험의 소지도 있다. 민족의 개념을 기초로 하면서도 통일의 방향을 보다 가치 중심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 가치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통일을 영토의 통합이나 민족의 결합의 차원을 넘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한반도 전체에 구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접근이다.

이러한 개념은 여러 장점을 가진다. 무엇보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통일을 설명할 때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쉽다. 또한 통일을 민족주의를 넘어 보편적 가치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주변국의 불필요한 경계심을 줄이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즉, 북한 사회의 회복과 발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미래세대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접근은 의미가 크다. 오늘날 20·30세대를 비롯한 젊은 세대는 과거와 같은 민족 중심의 통일 담론보다는 자유,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더욱 공감하는 경향이 있다. 통일을 이러한 가치 실현의 과정으로 설명할 때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역시 더욱 확대될 수 있



2) 한편,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의 배제,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요소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0. 4. 20. 89헌가113 등).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 동의하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적 목표를 지키기 위한 국가 운영의 기본원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을 것이다.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이다. 통일을 단순히 남한 체제로의 흡수로 이해하기보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보장되는 보편적 가치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심리적 거부감 역시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

즉, 이러한 접근은 급속한 통일뿐만 아니라 점진적 통일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정치적 단일국가를 곧바로 형성하지 않더라도 남북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유하는 가치공동체를 단계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통일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일은 어느 한 시점에 완성되는 사건이라기보다 공동의 가치를 축적해 가는 역사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장차 북한 내부의 변화가 이루어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유럽연합(EU)과 유사한 형태의 ‘유연한 통일’, 즉 ‘남북국가연합(Korean Union)’과 같은 새로운 통합 모델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단일국가만을 유일한 통일의 형태로 상정하기보다 가치공동체의 형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통합 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주장은 단순한 대남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둘러싼 새로운 도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북한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두 국가 관계를 헌법에 명시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헌법적 원칙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시기일수록 대한민국은 헌법이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인간의 존엄이라는 원칙을 더욱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현실적이고 일관된 통일 및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국가 관계의 성급한 수용이 아니라, 헌법이 제시하는 가치 위에서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다. 결국 한반도의 미래는 영구분단의 제도화가 아니라 자유와 인권, 인간의 존엄을 함께 실현하는 ‘한반도 가치공동체’를 향한 긴 여정 속에서 완성될 것이다. ☹️

칼럼_3

남과 북, ‘두 국가’로 갈라서는가

분단의 시대를 다시 읽는 개혁주의 통일선교의 시선

하광민 (총신대 통일개발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 낯선 시대의 문턱에서

1945년 분단 이후 남과 북은 서로 총부리를 겨누면서도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전제만은 놓지 않았다. 그 전제 위에서 통일은 언젠가 이루어야 할 민족의 과제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오래된 전제가 양쪽에서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2023년 12월, 김정은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 김일성 이래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어 온 통일 노선을 통째로 폐기한 것이다.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hostile two-state theory)의 공식 선언이었다. 이어 북한은 헌법에서 ‘통일’과 ‘동포’, ‘조국’이라는 말을 지웠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한 통일 관련 기구들을 해체했다. 같은 민족을 향해 ‘적’이라는 낙인을 국가 정책으로 못 박은 셈이다.

한편 2025년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 방향에서 또 하나의 ‘두 국가론’을 꺼내 들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peaceful two-state theory)가 그것이다. 남북이 사실상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되, 적대를 걷어내고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구상이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증오의 언어로, 다른 쪽에서는 평화의 언어로, 남과 북이 동시에 ‘두 국가’를 말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북녘을 품고 기도해 온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진다. 한국교회는 이 낯

선 현실 앞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2. 무엇이 달라졌는가 - 두 국가론의 두 얼굴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남북의 두 국가론은 겉으로는 정반대이지만, 그 뿌리를 살피면 뜻밖의 공통점이 드러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김정은 집권 이후 대남정책이 밝아온 궤적의 종착점이다. 2018-2019년의 대화 국면이 하노이 회담 결렬로 무너진 뒤, 2020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기점으로 북한은 단절과 대결로 돌아섰다. 그리고 2023년 말, 마침내 통일 자체를 포기하고 남한을 영구적 적국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유사시 남한 영토의 ‘점령’과 ‘평정’을 공공연히 입에 올리는 지경이다. 선대의 조국통일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북한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전환이다.

남한의 평화적 두 국가론은 이와 전혀 다른 자리에서 나왔다. 80년 넘게 굳어진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적대를 관리하며, 우선은 평화로운 공존부터 제도화하는 것이다. 2025년 광복절, 이재명 대통령은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라고 선언했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70%가 이 개념에 찬성했다. 현실을 직시하려는 정치적 지혜가 담긴 제안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평화적 두 국가론에는 간과할 수 없는 그늘도 함께 있다. 무엇보다 상대가 응답하지 않는다. 남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멈추고 확성기를 철거하는 동안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적대 노선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평화’가 자칫 ‘적대의 부재’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shalom)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 화해와 회복을 아우르는 총체적 평화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두 국가 관계가 제도로 굳어질 때, 여기에는 세 가지 무거운 물음이 따라붙는다. 첫째는 탈북민의 자리다. 지금 탈북민은 헌법 제3조에 근거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그러나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 이들의 신분은 ‘동포’에서 ‘외국인’ 혹은 ‘난민’으로 밀려날 위험이 있다. 이미 3만 5천 명을 넘어서 국내 탈북민 공동체와, 지금도 제3국에서 남한행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이것은 관념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다. 둘째는 민족 정체성의 약화다.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을 제도적으로 허물어 분단을 ‘비정상’이 아닌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다. 셋째는 분단의 고착이다. ‘통일 지향’이

라는 수사가 유지된다 해도, 두 국가 체제가 굳어지면 통일의 동력은 서서히 식어갈 여지가 있다.

결국 남북의 두 국가론은 지향이 정반대일지언정, 하나의 공통된 틀 안에 갇혀 있다. 양쪽 모두 ‘국가’를 최종적인 분석 단위로 삼는다는 점이다. 북한은 ‘국가 간 적대’를, 남한은 ‘국가 간 평화공존’을 말하지만, 둘 다 국가를 넘어서 더 깊은 차원 — 민족의 유대, 인간의 존엄,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 을 시야에서 놓치고 있다. 바로 여기서 교회의 목소리가 필요해진다.

3. 왜 교회가 응답해야 하는가 - ‘국가’가 전부가 아니다

두 국가론이 드러내는 가장 깊은 문제는 ‘국가의 절대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지닌 동포를 ‘적’으로 규정한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다. 김정은 체제는 종교와 가정, 교육과 문화까지 국가가 통째로 흡수한 전체주의이며, 그 정점에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절대 주권을 지도자가 찬탈한 우상숭배가 놓여 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은 이 전체주의 논리가 바깥을 향해 뻗어 나간 형태다. 국가가 개인의 존엄에 대한 판단까지 독점하여, 남녘의 형제를 일괄 ‘적’으로 범주화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국가가 붙이는 정치적 딱지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다. 어떤 국가도 그 존엄을 ‘적’이라는 한 단어로 지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남한의 평화적 두 국가론도 신학적 점검을 피해 갈 수 없다. 현실을 인정하는 지혜와 원칙을 내려놓는 위험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이 있다. 만약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북한 주민의 인권, 종교의 자유, 이산가족의 고통 같은 구조적 불의를 외면한 채 겉모양의 관계 설정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예레미야가 꾸짖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렘 6:14)라는 거짓 평화로 흐를 수 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국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여러 제도 가운데 하나일 뿐, 인간 존재의 전부를 규정하는 궁극적 권위가 아니다. 국가는 정의를 세우고 악을 억제하도록 제한된 위임을 받았을 뿐이며(롬 13:4),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한계 앞에 서 있다(행 5:29). 그 권위는 위임된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 오래된 구분을 회복하는 자리에서 두 국가론에 대한 교회의 응답이 시작된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통일 담론이 걸어온 길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 담론은 크게 두 흐름으로 갈려 있었다. 보수 교회의 ‘북한 복음



〈네덜란드의 정치인이자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

화’ 담론은 북한 체제를 이상숭배적 전체주의로 진단하는 통찰과 선교적 열정을 지녔으나, 반공 이념과 뒤섞이거나 북한 주민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한계를 드러냈다. 진보 교회의 ‘평화·화해’ 담론은 적대를 누그러뜨리고 인도적 교류의 물꼬를 텃으나,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비판이 무뎌지거나 정부 정책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머무는 약점을 보였다. 두 흐름 모두 나름의 헌신을 담고 있으며,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맞춰 성경을 선택적으로 동원했다는 공통의 한계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 체제를 향한 예언자적 비판과 평화 공존의 지혜, 그리고 궁극적 화해의 소망을 한 틀 안에 담아내는 통합적 신학이다. 필자는 그 자원을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에게서 발견한다.

4. 카이퍼의 첫 번째 렌즈-영역주권: 국가는 절대자가 아니다

아브라함 카이퍼(1837-1920)는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정치가, 언론인이자 교육자였다.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를 세우고 총리를 지낸 이 사람의 신학적 확신은 한 문장에 압축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시는 곳은 단 한 뼘도 없다.” 이 확신은 세 개의 개념 — 영역주권(sphere sovereignty), 일반은총(common grace), 유기체적 세계관(organic worldview) — 으로 자란다. 이 셋은 오늘 우리가 두 국가론을 읽어내는 세 개의 렌즈가 된다.

첫 번째 렌즈는 영역주권이다. 카이퍼는 사회의 여러 영역 — 가정, 교회, 학교, 국가, 시장, 예술 — 이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고유한 권위를 받았다고 보았다. 가정의 권위는 국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교회의 권위도 국가에 기대지 않는다. 국가는 이 여러 영역 위에 군림하는 최고 권력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고유한 영역 안에서만 권위를 행사하도록 부름받은 하나의 제도다. 국가가 그 경계를 넘어 다른 영역을 삼키려 할 때, 카이퍼는 그것을 ‘영역 침탈’이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이 렌즈로 보면 북한 체제는 영역주권의 정반대 편에 서 있다. 북한에서 국가(당)는 가정과 종교, 교육과 경제, 문화까지 모든 영역을 삼켜버렸다. 출신성분과 연좌제로 가정을 움아매고, 성경을 지녔다는 이유로 사람을 수용소에 가두며, 교육은 주체사상 하나로 획일화되어 있다. 특히 김일성·김정은의 신격화는 하나님의 자리를 지도자가 차지한 이상숭배의 구조다. 필자가 오래전 학위논문에서 분석했듯이, 북한의 수령 신격화는 단순한 개인숭배를 넘어 기독교의 구원 서사를 체계적으로 모방한 유사종교 체계다. 적대적 두 국가론은 바로 이 전

체주의가 국경을 넘어 뻗은 형태다.

그렇다면 남한의 평화적 두 국가론은 이 렌즈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그것은 남북관계를 오로지 ‘국가’의 눈으로만 정의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영역주권의 관점에서 국가는 남북관계의 유일한 주체가 아니다. 교회는 국가와 구별된 고유한 자리에서 화해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정은 이산가족의 혈연이라는 고유한 차원을 지니며, 교육과 문화의 영역에서도 민간의 교류와 소통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다. 국가의 정책과 교회의 사명은 구별되어야 한다. 설령 국가가 현실적 이유로 ‘두 국가’를 받아들인다 해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하나됨이라는 자신의 사명을 내려놓을 수 없다. 이것은 교회가 국가 정책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국가와는 다른 차원에서 자기 소명을 살아낸다는 뜻이다.

5. 카이퍼의 두 번째 렌즈 - 일반은총: 평화는 통일의 대안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두 번째 렌즈는 일반은총이다. 카이퍼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특별은총(special grace)과, 모든 피조물에게 두루 미치는 일반은총(common grace)을 구별했다. 일반은총은 구원을 주지는 않지만, 죄의 파괴적 결과를 억제하고 사회에 최소한의 질서와 문화를 보존한다. 타락 이후에도 인류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믿지 않는 이들도 정의와 선을 어느 정도 행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이 은혜의 작용이다.

이 렌즈로 한반도의 분단을 보면 두 가지가 함께 잡힌다. 한편으로 분단은 창조 질서의 일부가 아니라 죄의 결과다. 식민 지배와 강대국의 냉전적 이해, 이념 갈등과 전쟁이 뒤엉켜 빚어낸 역사의 비극이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 정전 이후 한반도가 전면전으로 되돌아가지 않은 것, 남한에서 경제 발전과 민주화, 시민사회의 성숙이 이루어진 것, 심지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장마당과 외부 정보를 통해 의식의 균열이 생겨나는 것도 일반은총의 흔적으로 읽을 수 있다.

여기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가 가능해진다. 적대를 풀고 평화로운 공존을 꾀하는 노력은, 전쟁과 증오라는 죄의 결과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일반은총의 가치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부의 평화 노력을 무작정 부정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 의의를 인정하며 ‘비판적으로 동행’하는 편이 마땅하다.

그러나 일반은총의 가장 중요한 통찰은 그것이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는 데 있다. 일반은총은 죄의 결과를 억제할 뿐, 죄 자체를 치유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는 못한다. 이 원리를 한반도에 옮기면 분명해진다. 평화로운 공존은 전쟁의 위험을 낮추는 소중한 성취이지만, 분단이 남긴 근본적 상처 — 이산가족의 눈물, 80년간 쌓인 불신, 이질화된 언어와 세계관 — 를 치유하기에는 본질적으로 모자란다. 진정한 화해는 전쟁을 멈추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상처의 인정과 용서, 새로운 관계의 형성을 품는 총체적 과정이며,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화해의 능력, 곧 특별은총으로만 가능하다.

여기서 하나의 기준이 세워진다. 평화적 두 국가론을 궁극적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의 평화’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일반은총의 자리에서 정당하게 긍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분단을 영구화하는 ‘최종 상태’로 받아들이다면, 그것은 일반은총을 특별은총의 자리에 앉히는 신학적 오류가 된다. 마치 응급 처치의 성공에 만족한 의사가 근본 치료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응급처치는 생명을 살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치유를 대신할 수는 없다. 평화로운 공존은 통일의 대안이 아니라, 통일로 가는 길 위의 디딤돌이어야 한다.

6. 카이퍼의 세 번째 렌즈 - 유기체적 세계관: 잘린 것은 고착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이다

세 번째 렌즈는 유기체적 세계관이다. 카이퍼는 사회를 부품들의 기계적 조합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로 이해했다. 언어와 문화, 역사적 기억으로 결속된 민족은 이 유기적 생명의 표현이다. 여기서 카이퍼는 민족(nation)과 국가(state)를 뚜렷이 구분한다. 민족은 창조 질서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유기적 공동체이고, 국가는 죄의 현실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워진 제도적 틀이다. 카이퍼에게 민족은 국가보다 더 근원적인 실재다. 그러므로 남북이 정치적으로 두 국가로 갈라져 있다 해도, 한민족이라는 유기적 공동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 구분에서 결정적인 통찰이 나온다. 카이퍼는 유기체의 ‘자연적 분화’와 ‘병리적 분열’을 나눈다. 자연적 분화는 생명이 다양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뻗어가는 과정이지만, 병리적 분열은 외부의 폭력이나 내부의 질병으로 유기체의 통합이 파괴되는 상태다. 한반도의 분단은 명백히 후자에 속한다. 식민 지배와 냉전 강대국의 이해라는 외적 폭력에 의해 하나의 민족 유기체가 인위적으로 절단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기체의 관점에서 분단은 그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왜곡으로서 치유되어야 할 병리 현상이다. 잘린 것은

고착시킬 대상이 아니라 이어 붙여야 할 대상이다.

이 지점에서 카이퍼는 우리에게 소망 하나를 건넨다. 그가 ‘재생’(palingenesis)이라 부른 원리다. 특별은총으로 한 개인이 거듭나 그 삶 전체가 새로워지듯, 하나님의 은혜는 사회와 문화, 나아가 민족 공동체의 유기적 연대까지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역사를 이끈다는 것이다.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gratia naturam restaurat). 분단으로 훼손된 한민족의 연대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

7. 바울의 ‘우리’ - 둘로 하나를 만드신 화평

카이퍼의 유기체적 세계관은 바울의 공동체 신학과 만날 때 한층 깊어진다. 필자는 최근 로마서에 나타난 ‘우리’(ἡμεῖς) 개념을 분석하며 이 접점을 살펴본 바 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당대 가장 근본적인 분열을 다룬다. 그러면서 그 차이를 지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끌어안은 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우리’를 빚어낸다.

에베소서 2장은 이 비전을 더없이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 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엡 2:14-15).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깊은 골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εἷς καινὸς ἄνθρωπος)으로 통합되었듯이, 남북의 이질성을 넘어 새로운 공동체를 빚어가는 길이 여기에 있다.

바울의 ‘우리’ 신학이 카이퍼의 유기체론에 더하는 결정적 차원은 이것이다. 훼손된 유기체의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복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고후 5:17)를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 과정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옛 단일민족 국가로의 회귀가 아니다. 그것은 분단의 상처를 지나 그리스도의 화해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다시 지어지는 일이다. 바울이 이것을 ‘화해의 직분’(διακονία τῆς καταλλαγῆς, 고후 5:18)이라 불렀거니와, 바로 이 직분이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통일선교의 심장이다.

8.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제3의 길과 기도의 자리

카이퍼의 세 렌즈와 바울의 ‘우리’ 신학을 모으면, 두 국가론 앞에서 한국교회가 걸어야 할 ‘제3의 길’이 드러난다.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되 소망을 잃지 않는 길’이다. 사실상의 두 국가라는 현실은 인정하되(일반은총의 현실주의), 그



것을 최종 목표로 삼지는 않으며(특별은총의 지향), 교회는 국가 정책과 구별된 고유한 사명으로(영역주권의 자율성) 분열된 민족의 치유를 향해 나아간다(유기체적 통일 비전).

이 길은 관념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몇 가지 구체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앞에 놓인다. 무엇보다 탈북민을 지키는 일이 절박하다. 두 국가론이 제대로 굳어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이들의 법적 지

위다. 탈북민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남북 통일선교의 핵심 주체이며, 장차 북한 교회의 씨앗이다. 이들의 자리가 ‘동포’에서 ‘외국인’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교회는 이들의 법적·사회적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한 교회는 국가 간 관계의 경색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교회 고유의 대북 채널을 지켜가야 한다. 정부의 문이 닫힐 때에도 기도와 섬김의 통로는 닫히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남북의 이질화를 좁히는 동질성 회복의 노력,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와 전문가의 양성, 그리고 중앙아시아 고려인을 비롯한 디아스포라와의 연대 역시 우리가 지금부터 지어가야 할 못자리다.

그러나 이 모든 실천에 앞서, 그리고 이 모든 실천의 뿌리에 놓여야 할 것은 기도다. 북한은 지금도 복음의 불모지다. 국가가 ‘적대’를 선언하고 세상이 분단을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이려 할 때에도, 교회는 무릎으로 다른 현실을 붙든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북녘의 형제자매를 ‘적’이 아니라 ‘우리’로 품는 기도, 잘려 나간 민족의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땅에 복음이 다시 흐르기를 바라는 기도다.

두 국가의 시대가 밀려온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국가의 정책에 휩쓸리지 않는 자기 목소리를 지녀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되 소망을 놓지 않고, 국가의 한계를 알되 교회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으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화해를 ‘아직’ 오지 않은 통일의 현실 속에서 꾸준히 살아내는 것이다. 카이퍼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했듯이, 우리는 갈라진 이 반도의 모든 자리에서 화해와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았다. 그 부르심의 한복판에 오늘도 이 말씀이 서 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 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엡 2:14). ☺

탈북민 수기: 김정직 목사

제 8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그 새벽,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감격에 젖은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은 청년절(8월 28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식당으로 가서 쥐꼬리만 한 식사를 뱃속으로 털어 넣은 후, 평상시처럼 일을 나가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죄수들은 모두 다시 감옥 안으로 들여보내졌습니다. 청년절이라서 쉬나보다 하고 생각하며 감옥 안에서 줄을 맞춰 앉아 있는데 또 금세 문이 철컹철컹하며 열렸습니다. 그러고는 감시관 한 명이 들어와 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정직!” 저는 제 이름이 불리자마자 돌아서서 일어섰습니다. 감시관은 “너야? 나와! 아무 신발이나 신고 나와!”라며 저를 불러냈습니다. 무슨 연유인가 싶어 어리둥절해 하며 따라가니 집결소 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장은 저의 문서 서류를 뒤져보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관차대였네?” “네.” “무슨 기관차대야?” 북한에는 두 개의 기관차 종류가 있습니다. 내연(경유)기관차와 증기(석탄)기관차인데 저는 증기기관차대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이미 증기기관차는 없어졌을 시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여전히 증기기관차를 사용

하고 있었습니다. 증기기관차 연료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콕스 석탄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품질 차이 때문인지 북한의 석탄으로는 충분한 화력을 만들지 못해 증기압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밥을 짓기 위해 불을 땔 때도 북한의 갈탄은 한 두 양동이 분량을 써야 하는데, 수입탄은 한 주먹만 사용해도 충분한 화력이 나왔습니다.

제가 증기기관차대였다는 것을 안 소장은 본인의 속내를 밝혔습니다. 증기기관차에서 쓰는 수입탄을 훔쳐서 주민들에게 팔아먹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증기기관차대에 근무할 때부터 이미 사람들은 술, 담배, 두부반찬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기관사들과 거래하곤 했습니다. 어떤 간이 큰 사람들은 트럭을 차도에 세워놓고 한 트럭씩 수입탄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걸리면 두들겨 맞고 단련대에 가야 했지만 다들 몰래몰래 그 일을 해왔습니다. 소장은 제게 “너 친구 많겠네? 우리 집 석탄 다 떨어졌다. 같이 일 좀 하자”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니 소장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오늘부터 집결소 옆에 있는 강냉이밭 초소에 경비를 맡으라고 했습니다. 그 강냉이밭은 집결소 울타리 밖에 있는 밭으로 말하자면 그

냥 바깥세상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경비를 선다는 것은 웬만한 신임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어젯밤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곳에서 탈출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겠다고 서원했던 기도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비가 되는 것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조장이 된 사람이 반장이 되고, 그다음에야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수감자가 수개월 동안 공을 들이고 뇌물을 바쳐 그 자리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게다가 그 강냉이밭에는 이미 경비를 서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한 여자가 자신의 늙은 어머니와 함께 밤중에 그 강냉이밭을 서리하다가 걸린 일이 일어났고, 소장은 경비가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며 한 명 더 경비를 세워야겠다고 하면서 저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로 집결소 바깥에 있는 강냉이밭 경비가 되었습니다.

밭으로 가니 원래 그곳에 근무하던 경비가 있었습니다. 그 경비는 저를 보고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제가 소장의 명령으로 오늘부터 이곳에 경비를 서게 되었다고 설명하니 신나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저에게 경비막에 술이 있으니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술을 가지고 오니 대낮부터 저보고 함께 술을 마시자



〈라선시 경제특구 인근 옥수수 농장 감시탑에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 (로이터)〉

고 했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아서 먹지 않겠다고 했더니, 경비는 그럼 빵이라도 먹으라고 빵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그는 술을 마시고 저는 빵을 먹고 있었는데 열 시쯤 되니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트럭을 모는 안전원이었습니다. 그 트럭 운전수는 우리 동네 사람이었기에 저를 알아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피해 다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오자 저는 머리를 땅에 쳐박고 또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야는 뭐야?” 하며 경비에게 물었습니다. 대충 설명을 들은 그는 경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찬찬히 들어보니 경비와 운전수는 서로 술친구인 듯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술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그 운전수는 “오늘 청년절인데 술 한잔해라. 술 한 병 줄게!” 하며 그 경비를 잠깐 자기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신이 나서 길을 나서던 그 둘은 한번 뒤를 돌아 저를 보며, “야, 이 새끼 달아나는 거 아니야?” 하고 겁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안 달아납니다.” 하고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경비는 그렇게 운전수에게 받아 온 술을 또 신나게 들이키며 오전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도 마시라고 권했지만 저는 마시지 않고 옆에서 안주나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전 내내 술을 마셨지만 성에 차지 않았던지, 그는 점심때가 되자 또 술을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잠시 곰곰이 생각하던 그는 저를 보더니 우리 집이 어디쯤인가 묻고는 집에 가서 술을 가지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신 것 같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가니 집 문이 잠겨있어 옆집으로 갔습니다. 옆집 아주

머니는 저를 보더니 너는 중국에 갔던 것 아니냐며 놀라셨습니다. 아줌마에게 동생이 있는 곳을 물었더니 동생이 친구 집에 있다고 해서 저는 다시 바로 그 동생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동생은 친구들에게 ‘형이 이제 잡혀가서 죽겠거니’ 하며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놀라며 제 목을 끌어안고 반가워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함께 집에 들어가 여동생도 만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중국 친척들에게 연락해서 도움받겠다고 남양에 나가 있다고 하셔서 뵈 수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가지고 온 수제비를 같이 먹고 동생들에게 밤에 다시 탈출할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동생은 밤에 가면 늦으니, 기회가 생길 바로 지금 낮에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여동생이 자신도 같이 가겠다고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이 길을 같이 가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모르나며, 가다가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길이라고 겁을 주었지만, 여동생은 그래도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말렸지만 한참을 보고 있던 남동생이 데리고 가라고 거들면서, 저는 할 수 없이 여동생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술을 가지러 왔던 길에 탈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는 동생의 말대로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집을 나와 청진역 앞에 있던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보고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은 마치 재일교포처럼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잠시 중국에 나왔을 때 문 목사님을 통해 얻은 옷들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하룻밤 처갓집에서 자고 다시 출발하려고 했지만, 분명 저를 추적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기에, 이곳도 언제 안전원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집 안이 아닌, 뒤편 창고에 자리를 깔고 아내

와 아들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쯤 기차를 타러 역으로 나갔는데 정전으로 기차가 운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전이 되면 기차가 언제 들어올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역 앞을 서성이는 저에게 아내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돌아오자고 했지만, 불안했던 저는 그냥 역전에서 국수를 먹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한 번 더 보고 가라며 집에 가서 아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동생과 함께 역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으면 아내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걱정에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내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급박하게 소리치며 빨리 가라는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세요! 가!” 소리치며 손짓하는 아내 뒤에는 장모님이 아들을 업고 뛰어 오고 있었습니다. 집결소에서 날 잡기 위해 왔다며 어서 도망가라고 소리친 것이었습니다. 여동생과 저는 다급하게 기차에 올라탔고 그런 모습으로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장모님 등에 업혀 자고 있던 아들과 이별했습니다. 그것이 아내와 아들과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수성역까지 간 다음 내려서 회령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차길을 따라 한참을 걷고 있는데 평양에서 무산 가는 기차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침, 그 기차에는 열차원이었던 셋째 처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처제가 저를 알아보고 “아저씨~”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기차 안에서 손을 흔들어 보이던 처제의 모습이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처제의 모습입니다.

아침부터 걷기 시작한 저희는 저녁 무렵이 되어서 야 고무산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화물열차를 타고 회령까지 간 후에, 다시 열차를 갈아타고 남양에 도착했습니다. 집결소에 들어간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남양에 도착해서는 아버지의 친구분이 사시는 집에 들어가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국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안전원들이 매일 감시를 돌았고, 이를 피해 저희는 김치움에서 잠을 자며 언제 강을 넘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저씨가 마을에 사는 9살짜리 무당을 집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가 굶어 죽고 혼자가 되어 꽃제비로 떠돌다가 신내림을 받았는지 무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국경 지역에는 중국에 친척 방문을 하거나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마다 이 무당에게 물어보면 자주 맞아떨어져서 꽤나 옹한 무당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무당이나 점을 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몰래몰래 점을 치고 귀신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미신을 죄악시하고 ‘당을 믿어라, 수령을 믿어라’라고 외쳤지만, 많은 인민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허함 속에서 미신에 의지했습니다. 그 9살 무당 아이는 집 마당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혼자서 총 쏘는 시늉을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언제 강을 넘어야 할까 고민하는 것을 듣고는 “3일 새벽에 넘어가면 돼요. 그때 길이 열려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저씨는 3일에 떠나기 위해 준비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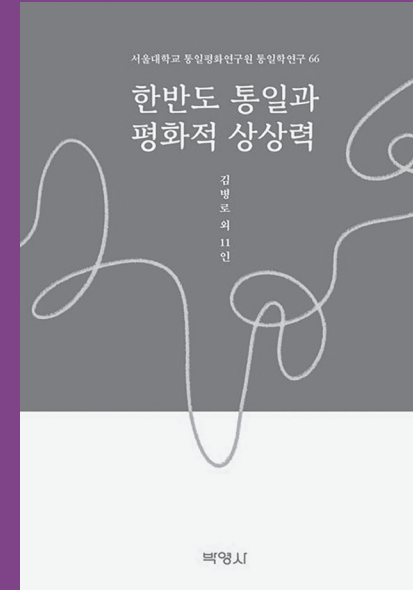
떠나기 전 새벽, 아저씨는 찰떡같이 붙어 잘되라고 시장에서 찰떡을 사 오셨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널 때 필요한 튜브를 만들어 챙겨 넣었습니다. 여동생과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묘사한 김치움(김장독을 넣어두기 위해 만든 땅구덩이)〉

함께 두만강 기슭까지 도착한 후에 튜브를 붙여 부풀린 후에 구멍을 막고 동생 몸에 씌우고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생을 끌고 가며 같이 강을 건너 중간쯤 왔을 때 이제 안심이 되었던 저는 동생에게 “이쯤 하면 이제 중국 땅에 거의 다 온 것 같다. 괜찮다.”라고 안도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동생은 신이 났는지 침범침범 발장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너 정신 나갔어?!” 라고 여동생을 꾸중했습니다. 그 찰나에 소란스러운 소리를 북한 경비대원들이 들었는지 “누구야?!”라고 외치며 총을 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미 대부분 넘어온 상황이었고, 북한 경비대원들은 어두운 데다가 중국 땅으로는 총을 쏠 수 없어서인지 엄한 곳에 총을 쏘며 위협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동생과 함께 두만강을 무사히 넘어 다시 중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 목: 한반도 통일과 평화적 상상력

저 자: 김병로 외 11인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6년 4월 28일

가 격: 20,000원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시드는 가운데, 북한 역시 정권 차원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며 통일을 사실상 폐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열망이 남북 모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단이라는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분쟁과 한반도의 긴장 고조라는 엄혹한 현실 속에 ‘어떻게 평화와 통일을 다시 이야기할 것인가’를 고민한 신진 학자들의 글 모음집, 《한반도 통일과 평화적 상상력》의 출간은 매우 반갑게 다가온다. 이 책은 당위적인 통일론을 넘어, 남북이 갈등을 완화하고 상생과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창의적 사고를 11명 저자의 다채로운 시각으로 제안한다.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같은 삶, 같은 마음을 상상한다”에서는 체제나 정치 단위가 아닌 ‘사람’의 눈높이에서 북한을 조명한다. 북한 주민들의 실제 삶,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장마당과 MZ세대,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과제 등을 다룬다. 2부 “남북통합과 평화적 상상력”에서는 남북 통합에 필요한 적대와 혐오를 극복하는 협력적 공존의 태도, 문화 통합의 주역으로서의 청년과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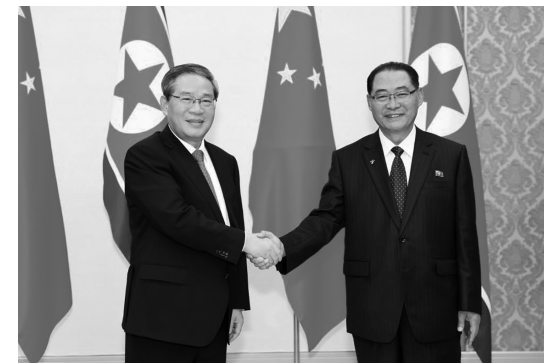
성, 그리고 화해의 공간으로서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조명한다. 3부 “통일을 바라보는 평화적 상상력”에서는 교육, 가족, 감정 등 일상적이고 삶과 밀접한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평화·통일의 실천적 노력을 다룬다.

이 책은 서문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등장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존의 틀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을 반영하듯, 책은 통일 논의에서 흔히 떠올리는 정치·외교·군사적 이슈 대신 ‘사람과 사회’에 집중한다. 변화하는 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내면을 세심히 들여다보고, 지속가능발전(SDGs)이라는 보편적 담론 아래 남북의 공동 번영을 상상한다. 나아가 남북 통합은 단지 정치적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통합이자 ‘사람과 사람의 공존’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제목처럼 ‘평화적 상상력’에 주목하며, ‘사람이 곧 평화다’라는 관점으로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엮어내고 있다.

흔히 평화나 통일이라 하면 뉴스 속 거창한 정치·군사적 담론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사람의 평화’라는 관점에서 11명의 신진 학자들이 풀어내는 이 책은, 멀게만 느껴지던 평화와 통일을 ‘나도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삶의 이야기’로 끌어놓는다. 단편적인 정답을 강요하기보다 함께 자유롭게 상상해 보자고 건네는 이 책의 제안은, 독자로 하여금 통일과 평화에 깊이 공감하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고민해보도록 이끄는 울림이 있다.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어가고 평화 모색보다는 ‘각자도생’을 택하려는 생각이 확산되는 요즘, 《한반도 통일과 평화적 상상력》이 전하는 신선한 시도는 평화와 통일이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중 서열 1~5위 총출동… 조약 65주년에 전략적 관계 과시한 북중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

북한과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만의 평양 방문에 이어,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고리로 더욱 끈끈해진 전략적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잇달은 고위급 인사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중은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당시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이번 65주년을 맞아 '성대한 기념행사'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이끄는 북한 측 당·정 대표단이 조약 체결 기념일(7월 11일) 하루 전날 먼저 베이징을 방문했다. 박 총리는 방중 기간(10~12일) 시 주석(권력 서열 1위), 리창 국무원 총리(2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3위), 차이치 당 중앙서기처 서기(5위)를 만났다.

중국 측의 답방도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중국 권력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정부 대표단이 지난 7월 15일 2박3일 일정으로 북한을 답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용원 노동당 비서, 박태성 내각총

리 등을 만났다. 중국의 권력 서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 전원이 이번 북중 우호조약 65주년 기념 인사교류에 참여한 것이다.

박태성 내각총리는 방중 기간 리창 총리 등을 만나 양국간 전략적 공조 강화와 경제무역 교류 확대, 의료·보건·교육 등 민생분야 협력 심화 등을 논의했다. 베이징시 도시철도 관제센터를 찾아 지하철 운영 시스템을 직접 시찰하며 경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뒤이어 방북한 왕 주석은 조용원 당 비서를 만나 양국·양당 간 당적 교류와 더불어 경제·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해 양국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북한 측 인사로 실무급 관료인 강철호 도시경영성 부상이 배석해 도시개발이나 교통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참고: 연합뉴스, 7월 17일) ☞

푸틴, 방러 최선희 北외무상 만나 “김정은과 우호관계 소중”



〈7월 19일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러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우호관계를 강조했다.

AFP·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7월 19일(현지시간) 최 외무상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해 달라"며 "양국의 우호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준 데 대한 감사를 표했다. 최 외무상의 방러는 지난해 10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이번 방러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만나 '제3차 전략대화'를 열고 양국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방러는 김 위원장의 방문을 사전 조율하려는 목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은 푸틴 대통령이 2024년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답방을 요청한 뒤 꾸준히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이 최고위급 상호 방문으로 동맹 관

계를 공고히 한 직후, 최 외무상이 곧바로 모스크바를 찾았다는 점에 대해 과거 느슨했던 중·러와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에 맞서 한반도 및 지역 정세를 관리하겠다는 북한의 구상이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참고: 머니투데이 7월 20일, 연합뉴스 7월 21일 외 언론보도 종합) 🐟

북, 여맹 8차대회 개최… “반동적 사상문화·생활양식 철저히 배격”



북한 노동당 외곽 여성단체인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이 지난 7월 13~14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5년 만에 열린 이번 제8차 대회에서는 사상교양을 강조하며 체제 결속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개통에 필요한 북한 측 세관의 대규모 공사가 진전되고 있는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의 상업위성이 지난 7월 20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 창고와 물류 시설, 세관과 보안시설 등이 들어설 북한 쪽 구역의 건물 골조 공사와 지붕 공사 등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외형을 갖추게 됐다고 7월 22일 보도했다.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정성학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5월 28일 촬영한 위성사진과 비교해 "공사 현장에 창고와 행정·보안 건물 수십동이 들어



〈미국의 상업위성이 7월 20일에 촬영한 신압록강대교의 북한 측 세관 공사 현장 (사진=RFA)〉

섰으며 건물 내부 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인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세관 오른쪽 남신의주역과 연결된 도로에는 건설 자재와 임시천막 등이 약 1km 이상 늘어선 것이 식별된다며 "개통에 맞춰 세관 시설을 빨리 완공하기 위해 중국 측에서 대량의 건설 자재와 설비를 직접 다리를 통해 반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신압록강대교는 북한과 중국의 물류·관광 교류 확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2014년 중국이 건설비를 부담해 다리 본체를 완공했으나 북한의 재정난과 건설자원 부족,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면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해 1월 공사가 재개됐으며 최근 북중 교류 동향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정식 개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는 연결되는 신압록강대교 연내 개통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통한 신의주-단둥 세관 가동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참고: RFA, 7월 22일) 🐟

을 다지고 향후 5년간의 과업을 제시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여맹의 최우선 과업으로 사상교양사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맹원들이 반동적인 자본주의 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철저히 배격하며 우리의 사회주의 사상과 문화를 지키기 위하여 건결히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월 최대 정치행사인 제9차 당 대회를 마무리한 뒤 당 외곽조직 대회를 줄줄이 소집·개최해 당대회 결정 사항인 새로운 5개년 계획 관철 등을 독려하고 있다. 청년동맹은 지난 4월 28~30일 평양에서 제11차 대회를, 직맹은 지난달 11~12일 제9차 대회를 열었다. (참고: 연합뉴스, 7월 15일) 🐟

1 올해 초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헌법에는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하는 영토 조항이 신설되고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두 국가’ 노선이 반영되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내용은 없었지만, 국무위원장에게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을 명기하고 명목상의 경제 사항마저 폐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헌법 개정 내용을 살펴볼 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대결 구도가 심화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북핵 문제가 평화적 해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우리 사회에 통일과 평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일의 기반이 되어 온 민족에 대한 의식이 사회적으로 점차 약해지는 가운데 북한이 통일과 민족 개념을 모두 폐기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와 충돌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진정한 평화는 아닐 것이기에, 통일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통일과 평화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한반도 전역을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하는 정체성을 지켜온 한국교회가, 이러한 뿌리와 자산을 잘 지키고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선교 현장이 변화하는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월 8~9일 정상회담을 통해 전면적인 교류 협력을 약속한 북한과 중국은, 뒤이은 잇단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이를 더욱 구체화하는 모습입니다. 신압록강대교의 북측 세관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등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움직임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 개선이 북한 선교의 문이 넓혀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안전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해외 북한 선교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과 주변국 간의 밀착 관계 속에서 선교 현장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종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 내 체류하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디지털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니라 이번 여름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북중 국경을 방문하는 여행팀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러시아는 탈북자 사역을 하던 백 모 선교사님을 2년 넘게 억류중인데 이어 지난 1월에는 박 모 선교사님을 체포하여 억류하면서 선교 현장의 긴장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선의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들이 변화하는 상황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특히 갇힌 선교사님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5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갇혀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 한총련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던 장백의 장문석 집사님께서 12년 만에 풀려나셔서 중국으로 귀환하신 소식은 우리에게 옥중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여전히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 등이 억류 중이고,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지하 교회 성도와 강제 북송 탈북 여성 신자가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수용소에 갇힌 성도와 억류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연좌제로 인해 처벌 및 추방을 당한 지하 교회 성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되어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기정사실화 되는 북한의 4대 세습, 그리고 핵무력을 다음 세대로까지 전수하려는 북한의 모습은 여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40대 초반에 불과한 김정은이 아직 10대 초반의 딸에게 후계 수업을 하는 상황 이면에 자리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살길은 권력의 세습이 아닌 회개와 변화일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든, 북한이 권력 세습에 집착하기보다 회개를 통한 변화를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길에서 온전히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7 현장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큰 비로 인해 중국 동북지역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체류 북한 여성들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큼, 이번 수해는 이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많은 중국 내 북한 여성들이 수해로 인해 경작하는 옥수수밭이 침수되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경우 수해가 농작물을 넘어 직접적으로 생활 현장을 위협하여 집을 버리고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수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북한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심적인 고통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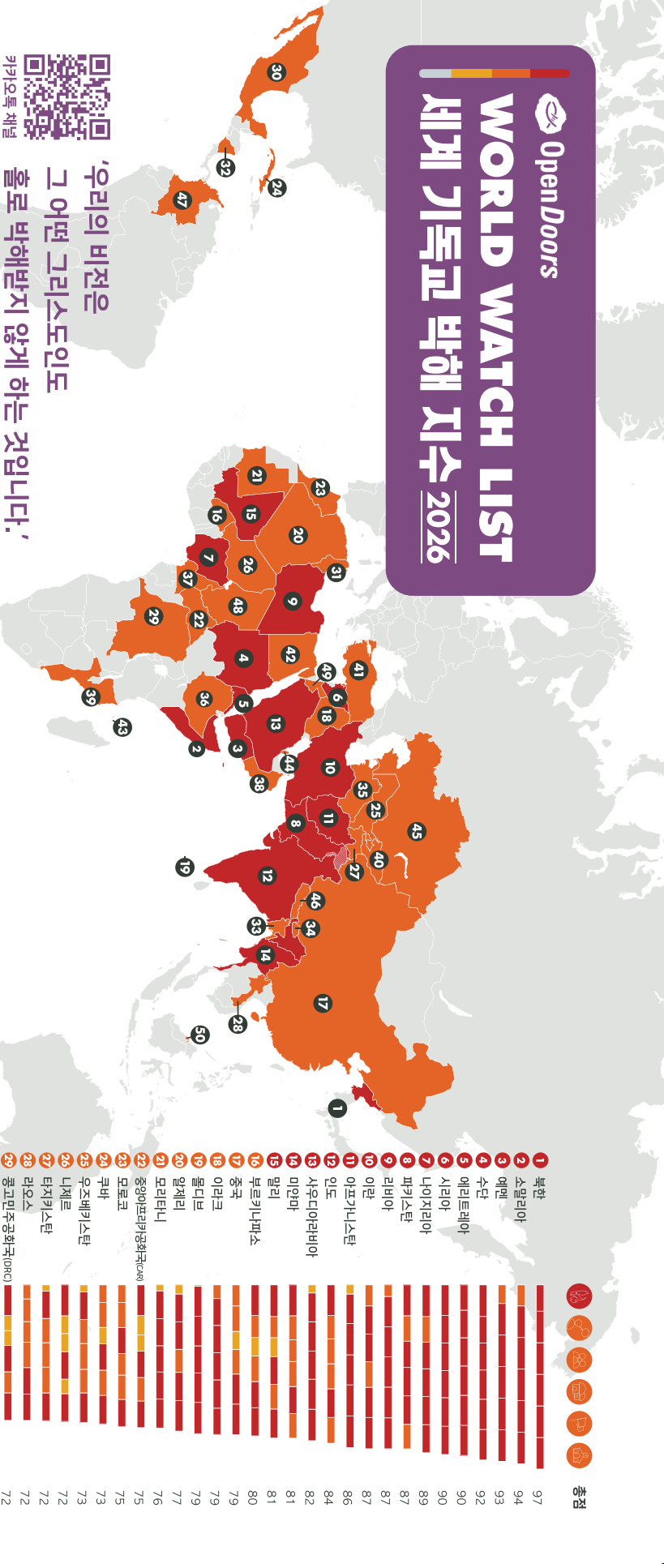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6년 7월 31일

OpenDoors WORLD WATCH LIST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2026

‘우리의 비전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홀로 박해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국가 목록에 대해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는 오픈도어의 분석가들이 150개국 현지 전문가들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각 국가의 박해 상황은 폭력과 압박을 추적하는 점수 시스템을 통해 기록된다. 이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사건의 수와 심각성, 그리고 신앙 생활의 5개 영역에서 박해의 정도를 측정한다.

폭력 개인 생활 가족 생활 공동체 생활 국가 생활 교회 생활



각 항목의 최대 점수는 16.7점이며, 이를 모두 합산했을 때 총 최대 점수는 100점이다.

각 국가의 순위는 100점 만점 중 해당 국가의 총점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박해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박해 정도

● 높음 ● 매우 높음 ● 극심함
4.1-60점 61-80점 81-100점

목록에 포함된 모든 국가는 기독교 박해 수준이 '매우 높음' 또는 '극심함' 단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 내 기독교인들이 겪는 박해의 강도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



+



=

순위